

공무원들, 쇠고기수입 '정부지침 거부운동' 선언

8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6.02 12:15

3일 운송저지 투쟁, 28일 5만 이상 전조합원 결의대회 개최키로

[사진1]

행정안전부가 예정대로 3일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장관고시를 관보에 게재한다는 방침아래 공무원들이 쇠고기수입 정부홍보 행정지침 등의 지시에 대해 거부운동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는 2일 오전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선 기관에 내려진 쇠고기협상 정부홍보지침 관련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이외에도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와 부당지시거부 결의 서명을 실시키로 하고 '선언내용을 기초로 부당한 명령을 하달하지 말 것'을 요구 하는 기관장 면담을 본부와 지부별로 추진키로 했다.

행정거부는 계획 수립과 입안, 과업수행 등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행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으로 심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노조는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 관련 3일 오전9시부터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주)효성광주냉장에서 각 본부별 5인1조로 운송저지팀을 구성해 운송저지 투쟁에 결합키로 했다.

아울러 물 사유화,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공공부문 민영화, 공무원연금 개악 등 공직사회 현안과 관련해 오는 28일 5만명 이상의 전조합원 결의대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광우병 쇠고기수입 사태와 관련 한미 쇠고기협상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이진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부장과 전임 지부장인 정수경 농림부 사무관이 '쇠고기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